

# 속도제한장치 풀고 '살인 질주'한 대형차들

### 경찰, 관광버스·화물차 불법 개조 업자·운전자 30명 적발 KIA 야구단 버스 3대도 포함...구단측은 알면서도 묵인

울산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돈을 받고 관광 버스나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풀어준 업자와 '살인 질주'를 한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변경해 운행한 차량 중에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위해 이용했던 선수단 버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돈을 건네고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한 25t 트럭 운전기사 이모(56)씨 등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19명과 관광·전세버스 기사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한적한 도로에서 1대당 15만~20만원을 받고 관광·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갈레토'라는 기기를 차량 ECU(전자제어 장치)에 연결해 차량의 제한된 최고 속도 설정 값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대형 버스나 화물

차의 사고에 대해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시부터 전자제어 장치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속도를 제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설정 기준 이상을 달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은 전세 버스는 시속 100km, 16t 이상의 화물특수차량은 시속 90km다.

김씨 등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엔진 출력 증강', '맵핑작업' 등이라고 적힌 명함을 관광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출입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단 주변 차고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무작위로 배포해 차량 불법 개조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오르막 차로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져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없애고, 빠른 운행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가 조작된 대형 버스에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이용하던 버스 3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선수단의 원정 경기 등을 이유로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버스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해 운행하다가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고 속도를 다시 제한했다"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되지만 적발된 정비업자와 운전기사들은 영업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선수들이 경기에 늦지 않도록 움직이기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고시생모임 광주서 연일 시위하는 까닭은 11월 사시 존치 법안 심의 앞두고 '문재인 마음 돌리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매일 광주에서 시위<사진>을 벌이고 있다. 왜 일까? 사시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1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따르면 고시생모임 대표 등 10여명은 지난 15일부터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매일 3000배를 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또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고 서명도 받고 있다. 6000여 회원으로 구성된 고시생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시 존치 당위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사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문 전 대표가 사시 폐지 입장을 버리고 찬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문 전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시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 다음달 10일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고시생들은 법조인이 꿈이다. 사시가 폐지되면 이들은 미래도 꿈

도 없어진다"며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힘있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졸·전문대졸이면 로스쿨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데, 사회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문 전 대표가 사시 폐지 입장을 버리고 찬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문 전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시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 다음달 10일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형버스 블랙박스 불나면 무용지물

###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위해 충격 견딜 새 제품 개발 필요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의 결정적 증거인 '차량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소실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 운행기록장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차량에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는 모두 70여종으로 불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관광버스나 시내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그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 주행거리,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차량위치 등 전반적인 주행기록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

기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준수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사고 직후 운행기록장치를 먼저 확보하려고 했다. 운전기사 이모(48)씨의 끼어들기와 과속, 졸음운전 등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행기록장치가 불에 타 복구 불가능해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6일 이씨가 "차로변경을 하려 했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혐의만 입증한 상황이다.

최근 대형 버스나 화물 트럭에 의한 대형 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비행기용 블랙박스의 경우 추락 후에도 튕겨 나가거나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일정 시간 버티면서 기록을 보관한다"며 "비행기 수준의 블랙박스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화재와 충격은 견딜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수면 상승에 침수된 도로 18일 오후 목포시 동명동 부두 인근 도로 200m 구간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로 1시간20분간 통제됐다. 이날 달·지구·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목포의 해수면이 520cm(오후 3시52분)까지 높아져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 반대파 조직원 찢른 조폭 체포

말다툼 도중 반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찢른 폭력조직 조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22)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골목에서 반대파 폭력조직 조직원 백모(21)씨를 흉기로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보다 후배인 백씨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힘싸움에서 밀리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양농협 노조 '불법 도청 논란' 간부·직원 3명 고발

'광양농협의 노조원 대화 불법 도청 논란'<광주일보 17일자 6면>과 관련, 광양농협 노조가 농협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지부는 18일 광양농협 간부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금융노조는 고발장에서 "광양농협 김모 조합장 등은 노조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5일 농협 2층 사무실에서 녹음기로 노조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광양농협이 노조원들을 불법도청하고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광양농협 조합장 사퇴 및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간부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광양농협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했다"며 엄정한 수사 촉구를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 무단횡단 범칙금 통지서 경찰관 입에 구겨넣은 '막가파 주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나 통지서를 찢어 경찰관 입에 구겨 넣은 40대 주부가 경찰서행.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9)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천모(52) 경위를

밀치고 김모(29) 순경의 입에 찢은 통지서를 구겨 넣었다는 것.

○...이씨는 무단횡단 직후 경찰에 적발돼 무단횡단 범칙금(2만원) 통지서 발부에 항의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관의 제지 신호조차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음에도 통지서 발부의 부당성만을 주장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223-5506 ■

구도청 |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